

## 남해안 3개 시도,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선언, 수도권 맞설 성장거점으로
- 관광·교통·기후위기·균형발전 등 주요현안 해결에 협력기로
- 정부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김 지사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발전축을 만들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월 31일 오후 5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함께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남·부산·전남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실무 위원을 맡는다. 향후 매년 1회 정기회 개최 등을 통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회는 부산, 전남, 경남 순으로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는 지리적 여건과 산업 구조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할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3개 시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임을 선언했다.

또한 총 7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채택된 과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공개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등이다.

또한 3개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해안권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멈추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역주도 균형발전 뉴딜사업 적극 추진과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조속 실시 등 세 가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중심의 균형발전으로 가야된다”며 이와 함께 “경남이 하고 있는 방식처럼 동남권 메가시티로 해 나가되 영남권 단위의 권역별 발전계획, 해양레저관광분야에 남해안권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권역별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해 수도권에 경쟁할 수 있는 발전축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4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아 ‘권역별 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남해안 3개 시도는 2018년 12월 20일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조성을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사진 추후 게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이동관 주무관(055-211-2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